

세부과제명	추진실적 및 향후계획	비 고
1-1.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 확대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○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(2015. 1. 2.) 제정내용 :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, 연구결과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
1-2. 심의회의 의견 청취권 도입 •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도입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○○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」(제5125호) 전부 개정 개정내용 : 의견 청취 절차 도입 <p>제15조(의견 청취 등) 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
1-3.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‘이해충돌방지장치’ 마련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○○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개정(제7조의2) 입법예고(“15.2.27.”)→개정 완료(“15.5.15.”) 개정내용 : 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·기피·회피 적용 <p>제7조의2(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.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p>	
1-4.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기능 확대 - 타당성, 평가, 결과, 점검 등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기능확대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○○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개정 시행(“15.1.1.) 내용 :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타당성, 점검까지 확대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. 용역의 수행기간, 용역비,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3. 유사·연관 용역과제의 통합 가능여부 4.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5.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6.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	
1-5. 일정 소수안건은 심의	[추진실적] 이행완료	*자율과제

세부과제명	추진실적 및 향후계획	비 고
회의 소위원회 운영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사대상 증가할 경우 신속·효율성 위해 소위원회 구성 운영 · 「○○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에 소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<div> <p>제2조(소위원회) ① 「○○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안건 3건 미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, 위원은 소위원장 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되,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</p> </div>	
1-7.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실무 검토 강화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○○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(제10조제1항) <div> <p>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3.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4.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</div>	
1-8. 중·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검토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○○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개정 시행(‘15.1.1) · 내용 : 용역과제와 중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 조항 명시 <div> <p>제6조(심의안건 제출) ②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, 학계 또는 자체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, 자료등과의 유사·중복성 여부 2.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.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.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 종합방안 </div>	
2-1.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2015년 학술용역 종합관리계획」에 반영 · 비전추진단-3105(‘15. 4. 9.)호 · 내용 : 계약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명시 	

세부과제명	추진실적 및 향후계획	비 고
	<p>'15년 학술용역 종합관리계획 5쪽</p> <p>○ 수의계약 최소화, 공개경쟁 방식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의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함 * 학술용역 수의계약 기준금액 > 2천만원 이하(법상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이나 2천만원 초과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 지정 불가) - 수의계약 대상은 조달청 등록업체(기관)를 기본원칙으로 하고,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시 적격자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 - 입찰참가 대상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 등 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입찰참가자격 확대 	
2-2. 유사·연관 용역과제 통합발주 방안 검토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○○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개정 시행('15.1.1) · 내용 :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타당성, 점검까지 확대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. 용역의 수행기간, 용역비, 과업 지시서의 적정성 3. 유사·연관 용역과제의 통합 가능여부 4.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5.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6.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</p>	
2-3. 계약 입찰공고시 청렴 계약이행조건 의무고지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조건 고지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징구하고 있으며, 입찰공고 시에도 청렴이행조건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음 -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받도록 하여 불법 하도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, 또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(감사과 내) 운영을 안내하여 부정하도급을 제재하고 있음 <p>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중 일부,</p> <p>6.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(일괄 하도급, 무면허 하도급, 재하도급)을 하지 않겠으며,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.</p> <p>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중 일부,</p> <p>제6조(기타사항)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·직원(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·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)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,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.</p>	

세부과제명	추진실적 및 향후계획	비 고
	<p>② 본건 입찰, 계약체결, 계약이행, 준공과 관련하여 ○○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, 서류열람,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(일괄 하도급, 무면허 하도급, 재하도급)을 하지 않겠으며,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</p>	
<p>2-4.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용역관리부서의 지정 용역과제 책임성 부여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용역실명제 도입 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용역관리부서의 지정 <p>제9조(용역실명제)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·본부장, 과장·담당관, 담당, 주무관으로 한다. 단, 출장소, 직속기관,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이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>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.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3.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	
<p>3-1.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 의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함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○○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개정(제1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법예고("15.2.27.)→개정 완료("15.5.15.) 개정내용 : 연구결과 공개매체를 도 홈페이지 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(프리즘)으로 확대 <p>제14조(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)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(프리즘)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, ○○도 홈페이지 정부3.0정보공개 → 도정정책→ 학술용역 페이지 및 정책실명사업(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, 평가 포함)에 용역결과 전문 및 관련자·참여자의 실명공개 	
<p>3-3. 용역과제물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</p>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 위해 외부평가위원도입 	

세부과제명	추진실적 및 향후계획	비 고
	<p>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.</p>	
4-2.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체계의 명확화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p>- 「○○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○○시 용역관리 지침」의 개정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여 추진중</p>	
<p>4-3.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의제외 필요시 재정 규모 등을 고려 1천만원 범위 내 제한 • 공통경비도 세부사업계획 제출을 통한 심의대상 포함 	<p>[추진실적] 이행 완료</p> <p>- 「○○도 학술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」 개정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○○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.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예산 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. 천재지변,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.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.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	
<p>4-4. 학술연구용역 개념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학술연구용역’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부 수준으로 명확히 함 • ‘기술용역’과 ‘학술용역’이 혼재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	<p>[추진실적] 이행완료</p> <p>- ○○시 용역관리조례 제1조 2(정의)</p> <p>- 조례개정 : 2014.12.31.</p>	

세부과제명	추진실적 및 향후계획	비 고
	<p>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학술용역”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, 연구, 조사, 검사, 평가,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○○시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. 2. “기술용역”이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3호,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호,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,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5호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, 「주택법」 제24조제1항,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. 3. “일반용역”이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외의 용역을 말한다. 	